일조량 좋은 전남, 태양광으로 복지시설 돕는다

도-한전 '수익공유형 발전사업' MOU 체결

125곳 옥상에 설치 희망… 경로당 20곳도 지원

풍부한 일조량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전남도내 복지시설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자립을 돕는 '수익공유형 사업'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태양광을 통해 복지시설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전남도와 한국전력이 '복지'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시켜 의존적 재정상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지속가능한 자립 발전을 지원하는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7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조환익 한국전력사장, 이현준 전남사회복지법인 대표(무안군 진성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사회복지법인 대상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재무적 투자자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후 복지법인 산하시설 건물옥상 및 일반부지에 240억원을 투자,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전체 1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20년간 이를 운영하면서 복지법인에 임대료는 물론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되돌려줌으로써 복지법인의 금전적 자립을 돕는 것이다.

현재 도내 78개 복지법인, 125개 시설에서 사업참여를 희망했으며, 특히 전남도는 바닥면적 200㎡ 이상 경로당 20곳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도 연계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후 활용 가능한 일반부지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최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대상은 일조량, 발전 가능용량,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복지재정에 어려움이 큰 현 상황에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과 함께 전국 최초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복지형 창조경제'의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B자산운용, 한국 남부발전, 한국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솔라(주)는 모두 475억원을 투자해 전남도내 30곳의 공공장소에 18MW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매달 67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연간 2만4090MW(한 달 평균 2007.5MW)를 생산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쌀 관세화는 전면개방 시작"

영암서 수확 앞둔 논 갈아엎어

영암군 농민들이 17일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을 규탄하며 수확을 앞둔 2500여㎡의 논을 갈아엎었다.

영암군 농민회는 이날 시종면 소재지에서 '쌀개방 반대, 식량 주권수호, 농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민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쌀개방정책을 비판했다.

농민회는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를 설계하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까지 '협상유지'의 권리가 보장돼 있음에도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해보지 않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쌀 관세화가 추가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쌀 관세화는 전면개방의 시작일 뿐이다"며 "수확기를 앞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논을 갈아엎는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kwangju.co.kr

억장이 무너지는 농심

17일 오전 영암군 시종면에서 농민들이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은 쌀 시장 전면개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규탄하며 벼 수확을 앞둔 2500여㎡의 논을 갈아엎고 있다. /영암=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과 나쁜 지자체 출자기관 임원 해임 가능

25일부터… 임원 반드시 공모해야

경영 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규정으로 마련됐다. 법률은 앞서 지난 3월24일 공포됐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관장은 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은 주무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10월에 통합공시하게 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세제 개편 광주·전남 年 1000억 세수증대 예상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광주·전남에서만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지방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주민세 등의 인상 효과는 미미하지만 지방세 감면 축소 및 종료에 따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따라 광주시는 주민세 46억원, 자동차세 2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3억원 등 매년 88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일부 지방세 감면 축소 및 종료에 따라 추가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관련 지방세는 담배소비가 34%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배소비세의 경우 27억원이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세는 34억원이 줄어 총 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도 주민세 76억원을 비롯한 자동차세 4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27억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또 각종 지방세 감면 축소 및 종료에 따라 취득세 513억원, 재산세 5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9억원, 주민세 14억원 등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세 621억원, 시·군세 224억원 등 모두 845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했다. 담배소비세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소비 감소에 따라 오히려 세수가 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늘어난 지방세수는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와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정가

"시교육청 부실 예산편성"

광주시의회 이은방(새정치·북구 6) 의원은 17일 "시교육청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예산편성·운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시교육청 2013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2013 회계연도 불용액이 전년대비 243억원이 증가한 1115억원이나 발생했다"면서 "이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추계에서부터 잘못하고 있어 기본운영비의 경우 2011년 13억원, 2012년 15억원, 2013년 9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해야"

광주시의회 임택(새정치·동구1) 의원은 17일 민선 6기 광주시 지방공기업과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현 시장의 측근 보은 인사 의혹 등으로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행 지방 공기업법 등에는 대표자에 대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공기업 경영과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단체장의 보은과 정실인사로 채워지고 있어 기관의 부실 경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적 한계에도 경기, 대전, 제주에서는 단체장 의지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윤장현 시장도 결단을 내려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여성정책관 허강숙씨

전남도는 17일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여성가족정책관에 허강숙(여·52·사진) 전 도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허 정책관은 순천 출신으로 여천군 공무원, 순천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서기관급(4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여성과 보육, 가족, 청소년 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